



새수영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수영구보

호외 제583호 2020. 12. 22.(화)

조례 ·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2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52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0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65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7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	80

회 람							
--------	--	--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의 관리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2. 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사업
3. 주요 구정 현안사업
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사항
5.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나. 구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 전체인원의 3분의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1인 및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0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진행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점검 및 자체 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점검 및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평가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①사업부서		②담 당 자 (전화번호)	
③사 업 명			
④선정기준		⑤사업기간	
⑥주요내용			

<기재항목>

- ① 사업부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② 담 당 자: 담당자를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③ 사 업 명: 추진하는 사업명을 기재
- ④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 ⑤ 사업기간: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 ⑥ 주요내용: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
(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	② 정책사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

<기재항목>

-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
(예 2020-1, 2020-2)
-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④ 사업 담당자를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제안이유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관리·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나.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및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제3조~제4조)
- 다.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제5조)
-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제6조)
- 마.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과정 설명(제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38명”을 “65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26명”을 “639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직급별 총계란 “638”을 “651”로 하고, 일반직 계 “634”를 “647”로 하며, 5급 총계란 “35”를 “37”로 하고, 5급 직속기관란 “3”을 “5”로 하며, 6급 이하 소계 “594”를 “60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안이유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급성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자 정원을 조정함

◆ 주요내용

가. 총정원을 638명에서 651명으로 조정(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626명 ⇒ 639명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제4조 별표3)

○ 총 계 : 638명 ⇒ 651명(증 13명)

○ 일반직 계 : 634명 ⇒ 647명(증 13명)

- 5급 : 35명 ⇒ 37명(증 2명), 직속기관 : 3명 ⇒ 5명(증 2명)

- 6급 이하 계 : 594명 ⇒ 605명(증 11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1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부산광역시내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을 “개업 중인”
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 하여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건실적부

연번	종류	부서명	자문일자	자문내용	회신일자	회신내용	비고

※ 사건 종류: 소송사건/이의신청/행정심판/법령해석/기타

※ 비고: 상담 유형(방문/전화/팩스/우편/전자우편/기타) 등

◆ 제안이유

고문변호사 위촉기준에서 지역제한·차별규제적 성격을 지닌 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고문변호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 가. 진입장벽·차별규제적 조문 정비(제2조)
- 나. 사건실적부 서식 변경(별지서식)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1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21조의5제3항”을 “제78조의3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을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을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제2조)

나.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제3~4조, 제6조의2)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5조, 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작업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 일부 신설 조항을 반영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및 유예사항 조항 신설
(제4조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2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령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택을 말한다.
2. “고령자경비원”이란 공동주택에서 내·외부를 순찰하며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거주자를 대신하여 배달물을 접수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무인경비시스템”이란 공동주택의 경비를 유인(有人)경비원 없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 사업추진
2. 고령자경비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의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1. 고령자경비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 방지 노력을 통한 고용 유지
2. 무인경비시스템을 유인(有人) 등의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 창출
3. 고령자경비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 향상

② 제1항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자경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주택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유지 또는 창출을 위한 고용 지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지원 보조금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 경비원 평균연봉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③ 고용지원 보조금 지원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고용지원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자경비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자경비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용지원 보조금의 지원순위
2.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창출 사업에 따른 안전심의
3. 그 밖에 고령자경비원 고용 창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자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공동주택업무 담당부서의 장 각 1명
2. 공인노무사 1명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1명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자리업무 담당부서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 순위에 따라 고용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보조금 수령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용지원 보조금 수령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고용 유지 및 창출계획서의 사업을 2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고용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 당시의 신청 자격을 고용지원 보조금 수령 기간 동안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 보조금을 받은 경우

- ② 고용지원 보조금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변동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보고 등) ① 고용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집행이 완료되면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지원 보조금의 예산집행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고용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및 조치)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1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시 부정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의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용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아파트 명			세대수/ 고령자 경비원수	/	
	주 소 (연락처)			입 주 자 대표회의 의 결 일		
				입주민 찬성비율(%)		
경비현황	경비원수	남()명 여()명	고 용 형 태	직영/위탁/기타 ()	근무 시간	시간/1인
	동 수		경비운영 방식	유인/혼합/통합관제		
신 청 내 용						
고용지원 보조금	<div style="padding-left: 20px;"> - 신청금액 : - 산출근거 : ▶ 산출식 : 고령경비원 평균연봉 × (30/100) × 지원대상 경비원수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20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신 청 인 _____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대표 (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수영구청장 귀하 </div>						
※ 첨부서류 : ○○○ 공동주택의 고용 유지 및 창출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고용지원 보조금 수령 서약서	
고용지원 보조금 수령자 대표	- 신 청 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p>상기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고용지원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 되어 고용지원 보조금 지원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고용유지 및 창출 계획서의 사업을 성실히 시행할 것 2. 고용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 당시 신청자격을 보조금 수령 기간 동안 유지할 것 3.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 4. 사업 집행 중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알릴 것 5. 사업집행이 완료되면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상기 사항 위반 시 고용지원 보조금이 환수되는 것에 동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 청 인 _____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대표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수영구청장 귀하</p>	

◆ 제안이유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을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촉진에 기여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에 관한 사항(제4조~제6조)
- 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제7조~제9조)
- 라. 지원결정 및 지원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제10조~제11조)
- 마.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제12조~제1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6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을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단서 조항 중 “제2호의 민간 전문가”를 “민간 전문가”로 하고, “3분의 1”을 “2분의 1”로 한다.

같은 항 제2호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를 “기금 등 재정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 취지에 따라 재난 관리기금 사용용도를 포괄적 사용 방식으로 개정
-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 변경 및 위촉위원 자격에 방재전문가 추가

◆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사용용도 개정(제5조)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현행화(제6조제1항)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 및 구성 변경(제9조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금연구역 및 시설에 금연실천을 장려하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활성화 등 구민 금연 분위기 확산 도모

◆ 주요내용

가. 금연 실천 장려 물품 등 지원 관련 조항 신설(제7조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 검토)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매우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시장 여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위탁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6조(민간위탁 승인 및 의회동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결과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상황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사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 계획
7.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8.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에 대한 심의나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0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제1항제7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사업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탁받은 사무나 시설물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양도·대여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에서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려면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감사 등)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위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와 관련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 제안이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 검토와 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계약체결 및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제1조~제3조)
-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 검토(제4조)
- 다. 민간위탁 계획 수립(제5조)
- 라. 민간위탁 승인 및 의회동의(제6조)
- 마. 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원회 구성·운영(제7조~제8조)
- 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제9조)
- 사. 수탁기관과의 계약체결(제10조)
- 아. 위탁기간의 갱신(제11조)
- 자. 계약의 해지 및 수탁기관의 의무(제12조~제13조)
- 차. 지도·감독 및 감사, 성과평가 등(제18조~제2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화장비용
3.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동장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비영리 단체·기관 등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산)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빈소(제례실)사진, 염습사진, 입관사진, 지원금 사용내역과 화장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 환수)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장래업체,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				
	신청금액		신청사유		장례일자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p>「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p>1.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p> <p>2. 지원요청 내역서(장제비 견적서) 1부</p>					
<p>‘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p> <p>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실명 확인</p> <p>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p> <p>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p> </div>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

구분	사진
빈소(제례실) 사진	
염습 (수의 착용)	
입관 (관 속 안치)	
결과보고 구비서류	1.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사진(빈소, 염습, 입관사진) 2. 지원금 사용내역서 1부(장제비 영수증 첨부) 3. 화장증명서 사본1부 4. 공설시설사용허가증(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1부

◆ 제안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3조)
- 나.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제4조~제6조)
- 다. 지원신청 및 결정(제7조)
- 라. 업무대행(제8조)
- 마. 정산 및 비용환수(제9조~제1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3.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회원수,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정산)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 및 안전에 대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 제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경로당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안전점검) ①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 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지원대상,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3조)
-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범위(제4조~제5조)
- 다. 지원금의 정산 및 중지(제6조~제7조)
- 라. 지도·감독 및 사용 제한(제8조~제9조)
- 마. 안전점검(제10조)
- 바. 준용(제1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폐업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영안정 및 창업 등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브랜드화를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7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의한 소상공인 연합회의 설립을 권장하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소관 국장과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소상공인 창업 및 기업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 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특별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등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전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제1조~제3조)
- 나. 소상공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제4조~제5조)
- 다. 경영안정 및 창업, 특별보증 지원(제6조~제7조)
- 라.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제8조)
- 마.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9조)
- 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기능(제10조~제11조)
- 사. 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해제(제12조~제13조)
- 아. 위원회 수당 및 사무의 위탁(제14조~제1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제2조 관련)

직급·직렬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651	433(3)	12	56	18	132
정무직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계	647	430(3)	11	56	18	132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4	3		1		
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37	20	2	5		10
행정사무관	19	12	2			5
의무사무관	3			3		
시설사무관	3	3				
행정·사회복지사무관	7	2				5
행정·시설사무관	1	1				
행정·보건·식품위생·환경사무관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2			2		
행정·농업·녹지사무관	1	1				

별 직급·직렬별	기 관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6급 소계		161	129	3	7	2	20
행정주사		89	77	3	1	1	7
세무주사		15	15				
사회복지주사		11	6				5
사서주사		1				1	
공업주사		1	1				
녹지주사		1	1				
전산주사		1	1				
방송통신주사		1	1				
환경주사		1	1				
시설주사		8	8				
행정·세무주사		7	4				3
행정·사회복지주사		7	2				5
행정·공업주사		2	2				
행정·보건주사		1	1				
행정·보건·식품위생주사		1	1				
행정·시설주사		2	2				
행정·방송통신 주사		1	1				
행정·해양수산·농업주사		1	1				
행정·공업·환경주사		1	1				
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		5			5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주사		1			1		
운전주사		2	2				
기계운영주사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7급 소계		190	135	6	14	4	31
행정주사보		86	67	3	1	1	14
세무주사보		12	12				
사회복지주사보		33	16				17
전산주사보		2	2				
사서주사보		3				3	
속기주사보		2		2			
공업주사보		4	4				
녹지주사보		2	2				
행정·수의·농업주사보		1	1				
해양수산주사보		1	1				
보건주사보		3	1		2		
식품위생주사보		2	2				
의료기술주사보		3			3		
약무주사보		1			1		
간호주사보		6			6		
환경주사보		2	2				
시설주사보		14	14				
방송통신주사보		3	3				
환경·보건·공업주사보		1	1				
운전주사보		7	5	1	1		
선박기관운영주사보		1	1				
사무운영주사보		1	1				

별 직급·직렬별	기 관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8급 소계		166	93(2)		23	7	43
행정서기		66	38(2)		1	2	25
세무서기		8	8				
사회복지서기		25	7				18
전산서기		4	3			1	
사서서기		3				3	
공업서기		9	7		1	1	
녹지서기		2	2				
해양수산서기		1	1				
보건서기		3	1		2		
식품위생서기		1	1				
의료기술서기		1			1		
간호서기		16			16		
시설서기		16	16				
방송통신서기		1	1				
행정·보건서기		1			1		
행정·환경서기		1	1				
보건·간호서기		1			1		
환경·공업서기		1	1				
행정·방송통신서기		1	1				
운전서기		3	3				
기계운영서기		1	1				
방재안전서기		1	1				

별 직급·직렬별	기 관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9급 소계		88	49(1)		6	5	28
행정서기보		47	32(1)		1	1	13
세무서기보		2	2				
사회복지서기보		15					15
사서서기보		4				4	
보건서기보		4			4		
식품위생서기보		1	1				
환경서기보		2	2				
시설서기보		6	6				
방송통신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2	1		1		
방재안전서기보		1	1				
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공업서기보		1	1				
별정직 계		3	2	1			
5급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직(전문위원)		1		1			
6급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직(비서요원)		1	1				
7·8급상당 소계		1	1				
8급상당 별정직(비서요원)		1	1				

※ 비고 : 별정직 정원은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 정원을 포함한다.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수임.

◆ 제안이유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 및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총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개정(별표)

가. 총계란 중 총계 638⇒651, 구분청 429⇒433, 보건소 51⇒56, 사업소 14⇒18

나. 정원 조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의 위임사항에 따라 규칙으로 제정된 사항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